

## 2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다.
  -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루어지곤 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작년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 참여예정 금융기관(22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8(화) 오전에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공고히 했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과거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 제도 운영의 관건인 기초급여 이외의 타 금원이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은행전산망 개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 이번에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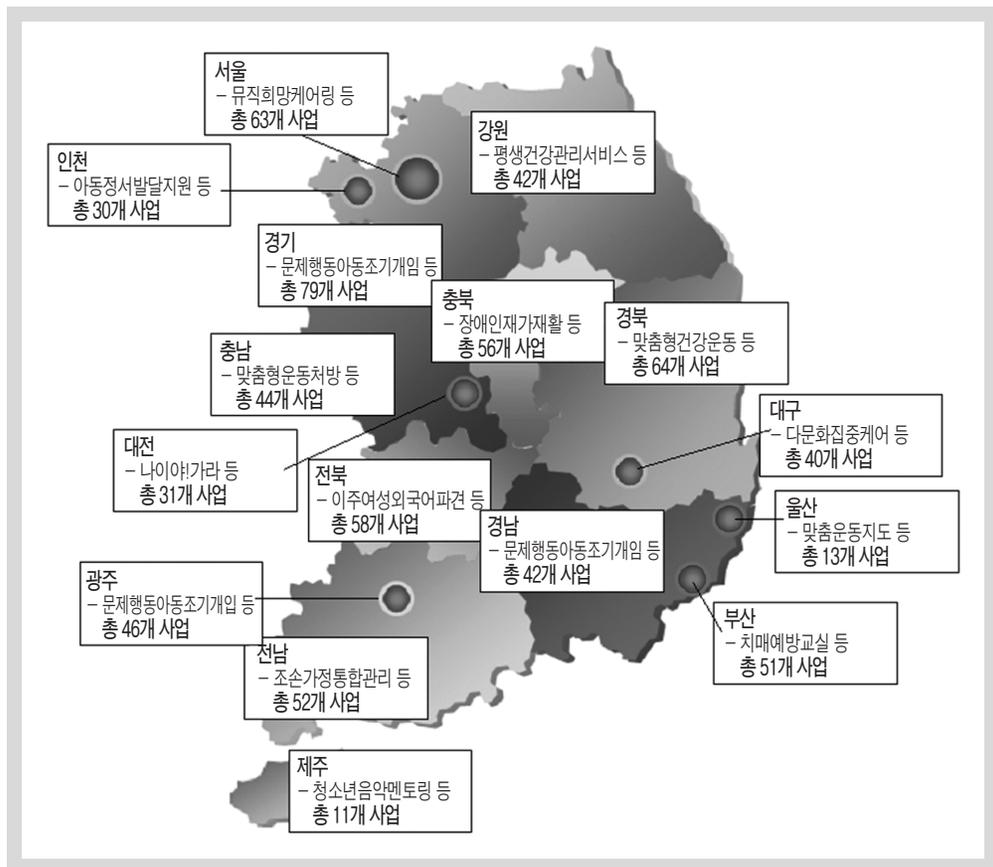
## ■■■ 지역사회서비스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이” 만드세요

- 보건복지부는 2011년 동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5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 중 2010년까지 진행되던 519개 사업에 1,149억 원을, 공모를 통해 2011년에 새롭게 선정된 204개 사업에 204억 원을 지원한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수요자가 바우처를 지급받은 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 2007년 8월 시작하여 2010년 519개 사업 실시('10년 기준 31만 명에게 서비스 제공, 16천 명 고용 창출)

- 2011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잠재수요가 크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204억 원 중 193억 원).
- 특히 기존 사업수가 적었던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관리서비스에 69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외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으로는
  - 노인의 인지적·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투입새”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거창군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극 교육서비스 등이 선정되었다.
- 2011년 신규사업은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을 거쳐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사업은 산업화 가능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지역별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연간 약 35만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 종전 16천개의 일자리에 더해 2천개 내외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9년	2010년	2011년
820억 원 (28만 명 수혜)	1,100억 원 (31만 명 수혜)	1,353억 원 (35만 명 수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155천 원)인 경우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단, 장애인·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도 가능하며, 아동건강관리서비스와 장애아동휠체어렌탈서비스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서비스 이용방법 및 각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1.2.10. 시행**

□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2011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에 포함

○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하여 가능하게 된다.

○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22:00~05:00

- 또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공중위생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 만족도는 UP, 건강위험도는 DOWN

-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고 건강상태 개선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사업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국가가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총 6개 지자체\*에서 총 2,2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 서울 강동·강북·송파, 경기 양평군, 대전, 전남
-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407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동 사업에 ‘만족’한 반면, ‘불만족’은 5.7%에 불과했다.
  - 이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73.4점이며,
  -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비스 시기와 질의 적절성’은 69.1점,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지식보유 및 설명’은 70.8점, ‘담당직원의 친절한 설명’은 75.3점, ‘본인부담금 수준’은 76.8점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9.8%는 ‘바우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59.2%는 ‘바우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2,2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동 사업이 비만·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건강위험도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허리둘레는 남성이 96→92cm, 여성이 93→90cm로 감소했고, 혈압은 136/84→134/82mmHg로, 중성지방도 246→210mg/dL로 낮아졌다.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콜레스테롤은 29→31mg/dL로 높아졌다.
  - 또한, 대상자의 73%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위험요인\* 개수가 감소되거나 유지되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증진·유지 효과를 나타냈다.
  - \* 복부비만, 고중성지방 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높은 혈압, 혈당 장애
- 복지부 관계자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도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층·저소득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련법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근거법안(건강관리서비스법, '10.5.17발의) 국회 계류 중

□ 이러한 결과는 오는 2월 11일(금)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되는 「제6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직무와 요건(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과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주요내용(계명대학교 김기진 교수)”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질의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 ■ ■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지원아동 차상위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36,425명) → 차상위 계층포함 아동(60,875명)

○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와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2011년 새롭게 도입된다.
  - 영유아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 자칫 때를 놓치기 쉽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09년 문자알림시스템을 개발하여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율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금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하여)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문자】** “○○어린이 B형간염 2차 접종 시기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 접종내역 확인하세요.”

※ '11년도 5,475,000건 발송 예정(일일 약 15,000건), 접종 예정일 당일 문자 1회 발송
  - 아울러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 예방접종 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유학,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로 그동안 접종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발표와 관련하여 2월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과정을 둘러보고 “영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 검진기관과 의료진에 수준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들 외에도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 노(老)-노(老)케어 일자리 34천개 → 44천개로 확대

- 노(老)-노(老)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청소, 말벗, 세탁, 취사 및 설거지 등 일상생활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요보호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만족도 높은 노인일자리 유형의 하나이다.
- 보건복지부는 11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이같은노(老)-노(老)케어 일자리를 10년 34천개에서 44천개까지 늘리고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유형	내용
개인활동 지원	목욕, 용변수발, 외출동행, 이발, 면도 등
가사 지원	식사도움, 생필품 구매, 의복손질, 청소, 빨래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관청 업무대행 등
정서지원	말벗, 책 읽어주기 등
건강지원	혈압, 혈당체크, 투약관리, 병원·약국동행 등

- 한편, 노(老)-노(老)케어를 포함한 노인일자리는 10년 18.6만개(2,918억원)에서 11년 20만개(3,090억원)로 1.4만개 증가하여 제공된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는 만 65세 이상(저소득층 노인 우선선발)이면 가능하며,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신청 할 수 있다.

**※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려면?**

- 모집시기: 2011년 2~3월 (각 지자체별로 상이)
-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선발)
- 참여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의 노인담당부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의 기관에 문의 및 상담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

-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7개월, 월36~46시간)을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초기 종자돈(Seed Money)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된다.
- 공공분야 일자리에선 스쿨존 교통지원, 자원재활용, 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한 사업(공익형)
  - 숲생태·문화재해설, 예절·한자교육 등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전달하는 사업(교육형)
  - 노(老)-노(老)케어, 다문화가정지원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복지형) 등이 있으며,
- 민간분야 일자리에선 실버카페, 식품제조, 택배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시장형),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등 민간업체에 직접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받는 사업(인력과 견형) 등이 있다.

유형		지원내용	일자리 종류
공공 분야	공익형	20만원(월) 7개월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묘지 상담도우미 사업 등
	교육형		• 숲 생태·문화재 해설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등
	복지형		• 노(老)-노(老)케어,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사업, 노인일자리모니터링 사업 등
민간 분야	인력파견형	15만원(연)	•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식당보조원,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
	시장형	130만원(연)	• 참기름·김치·떡 등 식품 제조·판매사업,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등

□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그룹의 경우 근로소득 증대로 빈곤율이 64.1%에서 58%로 6.1%p 감소하였다.

○ 또한,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축소되고 유급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패턴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으며, 1인당 연간 약 18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등 사회·경제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 555개소(아동복지시설 266, 장애인생활시설 289)를 평가할 결과, 2007년과 비교해 지표\*가 수정·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시설 환경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권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지표 조정: 2006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서비스 최소기준안(시설 및 환경·재정 및 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리·지역사회관계 등 6개로 구성), 인권보호 권장기준,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된 관련 법규나 규칙 등을 반영하여 기존 평가지표(2007년도)를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

연도	평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비고
2010	84.95	88.43	81.46	제4기
2007	84.50	87.36	81.64	제3기
2004	80.68	82.90	78.45	제2기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2007년보다 시설 환경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고 아동의 자치활동보장 등의 아동인권이 향상되었으며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 또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최우수(A등급)시설이 55개소(2007년)에서 70개소(2010년)로 15개소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에 58개소의 시설이 처음으로 시설평가에 참여하였고, 평가 지표 수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구분	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계(개소)	555	220(39.64)	196(35.32)	77(13.87)	42( 7.57)	20(3.60)
아동복지시설	266	150(56.39)	82(30.83)	18( 6.77)	13( 4.89)	3(1.13)
장애인생활시설	289	70(24.22)	114(39.45)	59(20.42)	29(10.03)	17(5.88)

- 보건복지부는 평가 하위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을 통해 하위시설 스스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리고, 시설평가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과 최우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2011년도에는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 ■■■ 노숙인·부랑인 대책, 확 바꾼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첫째,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

※ 현재 「부랑인·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원

-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10.12.6)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 5개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하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 일원화, 의료·주거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 그간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

※ 부랑인과 노숙인의 차이: 생계수단의 유(노숙인), 무(부랑인)

-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 거리노숙인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관련시설을 상담하여 연계하는 기능

-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 셋째,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국토해양부): '10.12월 현재 매입·전세임대 1,612호, 국민임대 39호 지원

-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서울시에서는 83개 기관(보건소 25개, 병원·약국 58개)을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노숙인 진료비 지원액: '10년 53억원)

-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노숙인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빅이슈코리아(노숙인잡지 발행), 두바퀴희망자전거(폐자전거 수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영농) 등 5개 기업

○ 이러한 노숙인·부랑인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 위기상황시 유기적인 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 아웃리치(Outreach) :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

□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정비 발표와 함께 2.15(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 서울역 주변에는 150여명의 노숙인이 서울역대합실, 중앙지하차도, 서울역파출소 지하도 등에 상주(서울시 집계)

○ 먼저,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상담·보호사업을 관할하는 서울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여재훈 소장)를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노숙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어 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역 파출소 지하도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거쳐, 서울시립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하여 노숙인 급식상황을 점검하였다.

○ 끝으로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정보 등을 가르치는 인문학 강의실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그 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고 하면서

○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 ■ ■ 복지부, 장애아동입양가정 지원

□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1년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570천원→627천원/월) 및 의료비 지원(252만원→260만원/년)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내의 입양아동 현황은 2004년 3,899명(국내:1,641명, 해외:2,258명)에서 2007년 2,652명(국내:1,388명, 해외:1,264명), 2009년 2,439명(국내:1,314명, 해외:1,1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2010년 국내입양아동 1,462명 중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

○ 이와 함께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건'에서 '270만원/건'으로 30만원 증액하여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간다고 밝혔다.

- 과거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을 입양할 때 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07년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해 왔다.

□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그간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입양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 진수희 장관은 먼저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두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하였다.

- 이날 전순걸 씨 부부(02-502-5817, 사진 및 영상취재 기협)는 정부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보장구(자세교정 특수의자·이동용 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이에 진수희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하여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어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한 진수희 장관은 그간 입양아동, 미혼모, 장애아동 등에 대한 사회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은 "국내입양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입양 관련 법개정을 통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복지정책, 내 손으로 디자인한다

- 보건복지부 「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 -

-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복지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내용은
  -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작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제안
  - 적은 비용으로 서민 생활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정책 제안
  - 보건복지 관련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으로, 보건복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신규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 이번 공모전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에 이은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제안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로 추가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의미로 2.18일 현재 과제수는 107개임.
    -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에서 확인 가능
- 공모기간은 2.21(월)~3.18(금)이며, 국민제안 선정 대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 ■ ■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 · 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
  -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참고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조회가능
  -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위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http://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